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19
----------	------

발의연월일 : 2020. 9. 10.

발 의 자 : 유기홍 · 서영교 · 김철민
민병덕 · 김수홍 · 박찬대
박완주 · 김진표 · 윤영덕
김병기 · 홍기원 · 윤준병
김종민 · 김민석 · 이탄희
황운하 · 홍성국 · 이병훈
정청래 · 권인숙 · 도종환
조승래 · 인재근 · 서동용
의원(24인)

제안이유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의 필요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을 추진으로 정책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60%에 이르고 있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1.),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협의체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가 각

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시 학생·청년, 학부모 대표자(대변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조).

마.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안 제7조 및 제9조).

사.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안 제10조).

아.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4조)

타.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둠(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사

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공정

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또는 그 밖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상당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에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 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8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

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2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④ 국회와 대통령은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추천·지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 학생 또는 청년, 학부모를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 및 위원 임기) 상임위원 및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조정절차에 대한 진행여부를 요청기관 등에 알려야 하고, 국민의견 수렴·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0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무처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2조,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규칙의 제정)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10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에 행위 중 그 소관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장과”를 “장(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⑦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의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⑧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

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⑩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⑪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및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교육과정 및 방과후”를 각각 “방과후”로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⑫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⑬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로 한다.